

보도자료



K I H A S 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https://kihasa.re.kr>

보도내용	□ 보건복지 이슈애포커스 제434호 발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정책 관련 주요 현안과 과제		
상세문의	인구정책기획단 장인수 부연구위원	☎	044-287-8311
배포부서	연구기획조정실 대외홍보팀장	이혜선	☎ 044-287-8345
	대외홍보팀 행정원 정지혜	☎	044-287-8015
분량	총 5매(그림 1종 포함)		
배포일시	2023년 4월 10일(월)		
보도일시	즉시		

광역지자체 저출산 대응 정책, 출산지표활용정책성과 모니터링·보육 지원·출산 지원 3개 측면에서 내실 있는 보완 필요해

※ 이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학술연구 결과이며, 국가승인통계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 이 글은 장인수 외(2022), 『광역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발간예정)을 요약, 재정리한 것입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원장 이태수)이 『보건복지 이슈애포커스』 제434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정책 관련 주요 현안과 과제’를 발간했다. 연구책임자는 인구정책기획단 장인수 부연구위원이다.
- 장인수 부연구위원은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 양상에 전 국가적 정책 대응 외에도 지역 차원 정책 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면서, “저출산 대응 정책을 국가뿐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도 심도 있게 추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책 추진 및 평가 관련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진단과 검토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 장 부연구위원은 “저출산 대응 정책의 추진 주체로서 중앙정부와 지역이 공유하고 인식할 수 있는 지역 차원의 현안을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더욱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응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역지자체의 관련 현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이어서 그는 “이번 조사는 출산 지표 활용 정책 성과 모니터링, 보육 지원, 출산 지원 3개 측면에서 정책 현안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 아래는 이슈엔포커스에 실린 주요 내용 요약이다.

주요 내용

- 최근 지역 차원의 저출산 정책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지만, 관련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진단과 검토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이해됨. 이에 이 글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정책 관련 현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과제를 제시함.
- 광역지자체 관련 집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현안을 제시함. 즉, 저출산 집계변수(지표)의 종단적 변화가 상이한 경우가 관찰됨. 또 국공립어린이집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광역지자체 내 관할 지역별 현황에서는 편차가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아울러, 지자체 출산 지원금 지원 사업에서의 지역 간 경쟁에 따라 정책 비효율과 재정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음.
- 상기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 광역지자체별 정책 수혜와 관련된 통계 생산 및 관리, 어린이집 이용률 제고를 위한 공공보육 관련 지원 특례 개선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가능성 고려, 출산지원금 재정에 대한 차등적 보조금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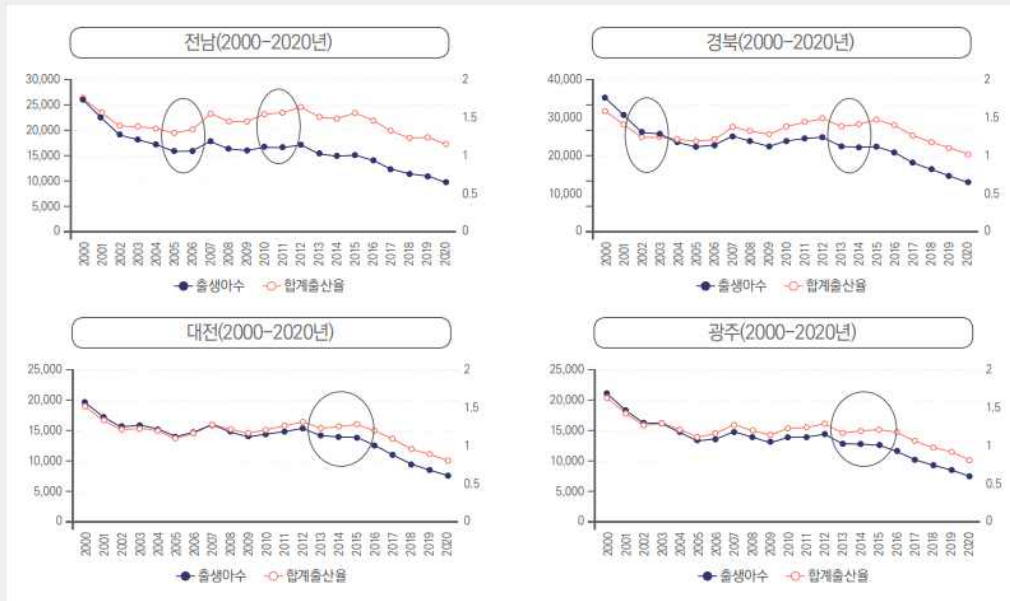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 양상에 대한 전 국가적 정책 대응 외에 지역 차원 정책 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그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정책은 저출산 관련 인구 동태에 대한 심층적 분석, 현안 검토, 정교한 평가 측면에서 다소 미흡하였음.
- 더욱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응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역지자체의 저출산 대응 정책 관련 현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정책과 관련한 주요 현안

- (정책 평가 및 인구 동태 모니터링 관련) 저출산 대응 정책 평가에 활용하는 집계 자료별로 상이한 특성
 - 저출산 대응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할 때 경험적으로 활용하는 집계지표에는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조출생률이 있음. 이 중 합계출산율은 지역 인구 동태와 맞물려 있어 실제 출생아 수와 상이할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는 원인 중 하나로 특정 기간에 합계출산율이 증가해도 15~49세 여성의 사회적 이동에 따른 규모 감소로 출생아 수가 감소할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표를 병행하여 활용하거나, 미시적 측면의 인구 동태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함.

[그림 1]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 증감 비교(불일치) 사례



주: 지역별 그림의 왼쪽 축은 출생아 수를, 오른쪽 축은 합계출산율을 각각 의미함. 지역별 해당 원 표시는 두 지표가 서로 상이한 방향(예를 들어, 합계출산율은 증가하지만 출생아 수는 감소함)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 줌.

자료: 통계청 집계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함; 장인수, 정찬우(2022a)에서 재인용함.

□ (보육 정책 관련) 지역별 영유아 인구 대비 어린이집 수와 이용률의 편중

- 2009~2020년 228개 시·군·구의 영유아 인구(0~6세) 1만 명당 어린이집 수의 추세를 살펴본 결과,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이 관측되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수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영유아 인구(0~6세) 1만 명당 전체 어린이집·국공립어린이집 수의 차이가 관측 시작 연도인 2009년에 비해 2020년에 더욱 심화됨.

□ (출산지원금 관련) 광역지자체 내 기초지자체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 추진의 비효율성과 재정 부담 가중

- 2020년에 비해 2021년의 단위 인구당 출산지원금 수혜자 수는 상대적으로 인구 규모가 크고 인구 밀도가 높은 광역시 지역이 광역도 지역에 비해 증가폭이 더 큰 반면, 출산지원금 평균 수혜 금액의 증가폭은 반대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 점, 출산지원금 총지출예산은 인구 감소가 심화된

광역시도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증가 양상이 관측되고 있는 점도 출산지원금 관련 재정 여건의 악화 및 지출의 비효율성을 보여 줌.

- 이러한 경향은 출산지원금과 같은 현금성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과 관련하여 인구 위기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좀 더 차등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향후 정책 과제

□ 광역지자체별 정책 수혜와 관련된 통계 생산 및 관리

- 광역지자체의 정책 추진 여건과 수급 현황을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역 출산 관련 통계를 양적·질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어린이집 이용률 제고를 위한 공공보육 관련 지원 특례 개선,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고려

- 지역별 수요 특성을 심도 있게 고려한 실질적 확충과 질적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조항별 수혜 대상의 특성을 추가로 반영하여 정책 대상의 특성을 더욱 세분화한 규정이 필요함. 또한 관련 대응 정책 추진 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을 고려할 수 있음.

□ 출산지원금 재정에 대한 차등적 보조금 정책 추진

- 지역 낙후도 등을 바탕으로 특정 지역의 출산지원금 재정지출을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보조하는 것이 한 예가 될 수 있음.

※ 이슈앤포커스 제434호 원문 보기

<http://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2381>